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49호

기자의 눈

### 황의조 사태와 아쉬운 대처

정재호 아시아투데이 기자

### 시행 시기 놓고 학부모선수 반발

### 정부, 내년부터 '학력미달 학생' 체육경기 출전금지

김지훈 국민일보 기자

###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스포츠인권발전세미나'

### '선수 보호' 나선 기성용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이상완 STN TV 기자

### '삼청교육대 부활?' SNS 등에 시민 조롱, 비난 목소리 봇물

### [단독]'해병대 훈련 논란' 대한체육회의 위험한 해명 "올림픽은 전쟁"

동규 노컷뉴스 기자

### 징계 요구 249건 중 99건만 징계...10명 중 6명 빠져나가

### [단독]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안 40%도 이행 안 했다

김현지, 조해수 시사저널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기자의 눈] 황의조 사태와 아쉬운 대처



연말 축구계가 이른바 '황의조(31·노리치시티) 사건'으로 뒤숭숭하다.

국가대표 공격수로 오랫동안 활약한 황의조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 연인과 관련한 불법촬영 혐의다.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폭로가 발단이 된 사건은 A씨가 황의조의 형수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줬다. 황의조는 "결백을 믿는다"며 형수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영상 속 여성 피해자인 B씨가 황의조와 A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이 와중에 황의조 측이 B씨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입장문에서 언급해 2차 가해 논란도 일어났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대한축구협회는 최근에야 '혐의를 벗을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고 황의조를 당분간 대표팀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야구 안우진, 배구 이재영·이다영 등 타 종목에서는 사회적 물의만으로 사법기관의 판결 이전에 태극마크를 반납했던 사례가 있다. 2021년 교제하던 여성에게 데이트 폭력 등을 가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배구 스타 정지석도 소속팀 결정으로 즉시 훈련에서 배제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국가대표도 1년간 뛰지 못한 바 있다.

이번 일로 황의조가 국민들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축구국가대표팀 이미지에 남긴 손상은 생각보다 크다. 황의조는 국가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위치에 있다. 축구계에는 황의조 말고도 해외파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비슷한 스캔들이 더 터질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나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처는 보다 빠르고 단호해야 했다. 소극적인 대응으로 '황의조 리스크'를 키운 대한축구협회의 조치가 못내 아쉽다는 반응들이 나오는 까닭이다. 적어도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이상 선수의 사생활은 일반 개인의 사생활과 같은 기준에 놓여서는 안 된다. 국가대표에게는 사생활도 관리의 영역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체육인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한층 더 높아져 있음을 스포츠계는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 정부, 내년부터 '학력미달 학생' 체육경기 출전금지

정부가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체육경기 참가를 금지하는 '최저학력제'를 내년 3월 말부터 시행한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학기 기말고사에서 기준을 넘는 성적을 얻지 못한 학생들은 출전 길이 막히게 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적용 예정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최저학력제는 올해 2학기 성적부터 적용된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이 제도 시행일이 '2024년 3월 24일'로 명시된 탓이다.

시행규칙상 최저학력제는 1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2학기에, 2학기 미달 시 다음 1학기에 교육부령으로 경기 출전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최저학력 기준을 넘지 못한 학생은 내년 상반기 대부분 국내 대회 출전 자격이 박탈된다.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이 최저학력제 시행 시기를 모호하게 안내해 혼란이 발생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2학기가 아닌 내년 1학기 성적을 바탕으로 내년 2학기 출전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안내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2024년 3월 24일 시행'이라는 시행규칙상 문구 외에 구체적인 정책 설명이 전혀 없던 탓이다. 이 문구만 놓고 보면 3월 24일자 성적을 기준으로 다음 학기 출전을 제한한다는 것인지, 직전 학기 성적을 바탕으로 3월 24일부터 출전을 제한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학부모와 선수들은 전자, 교육부는 후자로 시행규칙을 해석한 셈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기말고사가 시작됐고, 늦어도 12월 셋째주 안에 대부분 학교의 기말고사가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2학기 성적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최저학력을 맞추지 못하면 이를 만회할 기회가 없는 중학생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해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제한이 해제된다.

서울의 한 학교 축구부 관계자는 "특히 중2 선수들은 내년 3월부터 8월까지가 진학 시즌이다. 중요한 대회와 리그가 전부 몰려 있다"며 "진로와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다른 학교는 학부모에게 긴급히 문자 공지를 돌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공문에 나온 대로 '올해 2학기 성적을 토대로 내년 3월 24일부터 출전을 제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다만 2학기가 다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야 이런 해석을 공유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극 행정 등을 통해 이번 최저학력제 적용 논란으로 진학 시 피해를 보게 될 선수들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선수 보호' 나선 기성용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FC서울 선수단과 함께 '스포츠인권발전세미나'를 진행했다.

선수협은 12월 자선경기를 진행하는 점을 비롯해 선수들을 보호하고자 2023시즌 노력한 일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내용을 교육했다.

특히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FIFPRO)가 직접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휴식권 보장 및 부당한 계약에 관한 내용, 개정된 에이전트 룰 등 선수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FC서울은 올 시즌 최다 관중을 동원한 인기구단이다. 그만큼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SNS를 통한 무분별한 악플 등은 선수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선수협도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의 심장 기성용은 "국외에서 활동하면 그 국가의 선수협이 참으로 든든하다. 언제든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선수를 돕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한국도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선수들의 든든한 방패인 선수협이 있다는 점은 큰 힘이 된다.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지난해 FIFPRO가 선정한 Merit Award(선한 영향력상)수상자 기성용은 "선수협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선경기를 진행한다. 좋은 취지로 자선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선수들 모두가 많은 참여를 통해 분위기를 업시켰으면 좋겠다. 신영록과 유연수 선수 돕기가 진행되는 만큼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FC서울 선수단에서 기성용 선수가 대표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참으로 고맙다. 선수협은 선수들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 선수단과 미팅을 성공적으로 끝낸 선수협은 오는 16일 열린 선수협 자선경기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단독]'해병대 훈련 논란' 대한체육회의 위험한 해명 "올림픽은 전쟁"

"어떻게 이런 입장을, 국방부 산하 기관인가요?"

대한체육회가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해병대 훈련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체육회의 선수 훈련 기획 부서 간부 등은 7일 경상북도 포항의 해병대 1사단에 현장 답사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대에 역행하는 설화(說話)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체육회 선수 훈련 기획 부서 간부의 관련 입장 표명도 논란이다. 이 간부는 이날 CBS노컷뉴스의 관련 취재에 파리올림픽을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해병대 훈련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체육회 A 간부는 "파리올림픽 같은 대규모 이벤트는 국가 대항전이기 때문에 총만 안 들었지 전쟁이다. 그래서 (해병대 훈련을 통해) 국가관이나 국가에 대한 중요성, 국가대표의 자긍심, 이런 쪽에 대해 정신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림픽이 전쟁이기 때문에 (참전을 위해서는) 해병대 훈련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A 간부의 입장은 올림픽 현장과 강령에 정면 배치된다.

올림픽 헌장은 기본 원칙 1조에서 '올림픽 운동의 목적은 이해 관계를 떠난 우호적인 경기 대회에 세계의 경기자를 모이게 함으로써 인류 평화의 유지와 인류애에 공헌 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올림픽 강령에서는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대한체육회 "선수 경기력이 저하돼 반등 계기 만들기 위함"

체육회는 또 해병대 훈련을 시행하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프로그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 간부는 "(해병대 훈련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체육회 역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선수 부상이다. 부상 없이 '원 팀 코리아'라는 뜻을 모을 수 있는 이벤트로 봐달라. 헬기 레펠 같은 훈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선수들을) 육체적으로 괴롭혀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400명 되는 인원을 모아서 할 수 있으나 매일 훈련하는 장소에서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전제했다. A간부는 "양궁이나 펜싱 등 개별 종목들이 연말, 연초에 해병대 훈련을 포함한 일출봉 훈련 등등의 퍼포먼스를 한다"면서 "파리올림픽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이번에 전체 선수단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간부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선수들의 사기나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등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체육회 임원들도 회장을 포함해 입소한다. 종목에서도 선수들만 보내서 고생하고 오라는 것이 아니다. 각 종목의 시간 되는 임원들이 함께 입소한다"고 체육회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장 계속

## "바닷물에서 파이팅 외치고 사진 찍어 뉴스 홍보 하려는 발상"

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해병대 입소를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등에는 시민들의 조롱,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는 사회 지도층과 유명인, 일반 시민까지 대한체육회의 해병대 입소 계획을 성토했다는 글이 지속적으로 등록·게시되고 있다.

A 교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도쿄올림픽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3위밖에 못했다고 이 추위 속에 극기 훈련을 시키겠다고 한다"며 성적 지상주의를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정신력과 투지만을 강조하던 옛날로 타임 머신을 타고 가자는 얘기다. 일방통행식으로 결정하고 강압적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하니 가가 막힌다. 체육회 공문에는 가치 있는 스포츠, 같이하는 인권 존중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내가) 졌다"고 비꼬았다.

B 교수는 "바닷물에서 주먹 쥐며 파이팅 외치고 사진 찍어 뉴스 홍보하려고 하는 발상"이라며 "해병대 입소하면 정신력이 강화된다는 증거는 있나"라고 쓰아붙였다. 주부 C 씨는 '우리나라 국대 선수들 훈련량은 세계 최고로 알고 있다. 해병대보다 더 극한 훈련을 견뎌내는 선수들, 부상이라도 당하면 어찌려고 이러나'라고 우려했다.

교육 컨설팅업 종사자 D 씨는 "곧 삼청교육대도 부활하겠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몇 살인데 해병대 극기 훈련을 이런 한겨울에 실시하나. 무식한 X들"이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E 씨는 "차라리 메달 입상 못하면 남녀 구분 없이 36개월 군 복무를 시킨다고 하지 그러냐. 파리올림픽 역대급 성적이 벌써 기대된다"고 조롱했다.

청소년 지도사 F 씨는 "뭐든 정신력이 제일이라는 북한을 따라하는 따라쟁이들을 빨리 북한으로 보내 버려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 왜 1등이 꼴찌를 따라가지 못해서 안달일까. 역도 영웅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님이 (해병대 훈련에) 동의한다면 당장 정치를 포기하기 바란다"고 문체부의 중재를 요구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MZ세대인 시민 G 씨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발언을 근거로 삼으면서 "옛 방식으로 안 된다면서 해병대 훈련을 한다구? 옛의 기준이 조선 시대인가"라고 반문했다. 프리랜서 코치인 H 씨는 "선수들이 거부하라, 금메달에 환호하지 않겠다"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대한체육회 민원 게시판 링크를 등록하는 등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시민 I 씨는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해병대가 아니라 심리 치료사 같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정신력 강화다. 최고 스포츠 강국인 미국이 심리 지원을 해병대 보내서 하나"라고 충고했다. 시민 J 씨는 "(대한체육회장이) 책임자로서 실적 압박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성적이 안 나온)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이게 웬 말이나. 해병대는 군인을 훈련시키는 곳이지 운동 선수 양성소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 군사 문화 잔재 비판도 제기 "전두환, 박정희, 일제 강점기 군국주의 회귀"

황교익 맛 칼럼리스트는 "전두환, 박정희, 아니 일제 강점기 군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는군요"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출판사 대표인 K 씨는 '옛날 방식 훈련을 막아야 할 체육회가 앞장서서 대통령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듯하다. 메달을 못 따는 이유가 정신 무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청소년 인구가 줄면서 운동 저변이 좁아져서 더 그렇다'고 분석했다.

블로그에도 관련 포스팅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스포츠 심리 포스팅을 하는 L 블로그는 "이게 최선인가. 우리나라도 헝그리 정신을 찾는 것은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끈대스럽다"는 글을 게재했다. 스포츠 스토리를 게시하는 B 블로그는 '거꾸로 가는 대한체육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체육회의 목적은 대표팀 역량 강화가 아닌 정신력 강화"라고 비꼬는 글을 포스팅했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각 종목 국가대표 400여 명이 참여하는 해병대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0월 8일 항저우아시안게임 폐회 전날 기자 회견에서 "내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에 입촌하기 전에 해병대 극기 훈련을 하게 될 것이다. 저도 같이 하고 입촌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당시에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 [단독]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안 40%도 이행 안 했다

시사저널의 12월1일자 <[단독]“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미성년 선수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돈 상납받아”> 보도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수영연맹은 성폭행-돈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우영 인천시청 감독에 대해 국가대표팀 지도자 일시 제외를 결정했다. 진상 규명 후 최종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스포츠윤리센터, 인천시체육회에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성폭행 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진상 규명이 이뤄진다고 해도 결국 ‘숨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씨줄과 날줄처럼 얽히고설켜 있는 ‘스포츠계 카르텔’이 작동해, 결국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한체육회와 산하 시·도체육회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10건 중 4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저널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스포츠계 카르텔을 심층 취재했다.

## ‘성폭행-돈 상납’ 의혹 감독, 국가대표팀 제외

A 선수는 2020년 6월○○일 밤 11시를 잊지 못한다. 이날따라 협회장, B 감독, 동료 선수들과의 회식 자리가 길어졌다. 자정을 향해 갈 무렵, A 선수는 B 감독의 팔뚝이 자신의 가슴에 닿아있음을 느꼈다. B 감독이 팔뚝으로 A 선수의 왼쪽 가슴을 누르고 있던 것이다. A 선수는 곧바로 양팔로 자신의 가슴을 감싸고 움츠렸다. 하지만 B 감독은 A 선수가 잠시 팔을 내린 틈을 타 건배를 제의했고, 그사이 A 선수의 가슴을 다시 팔뚝으로 눌러댔다. 이러한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2019년 9월 우승 회식 자리에서도 B 감독이 A 선수의 왼쪽 가슴을 자신의 팔꿈치로 쓸어 올리거나 눌렀던 것이다. B 감독은 귓속말을 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A 선수의 귀에 닿게 했다. B 감독의 성추행이 반복되자, A 선수는 용기를 냈다. 먼저 동료 선수, 트레이너, 코치 등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일부 동료 선수가 수사 단계에서 “성추행 사실을 A 선수에게서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고비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결국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 감독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선수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이후 해당 팀의 선수, 코치, 트레이너 등은 팀 해체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과 지위에 있었다”면서 “이러한 만큼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는 이들의 일부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편집자 주-2차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판결문 대목은 스포츠계 카르텔의 본질을 보여준다.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인 홍덕기 경상대 교수는 “수요자인 선수, 공급자인 지도자, 관리자인 체육단체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어느 한 문제를 푼다고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스포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은폐 구조’가 작동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폐쇄적인 스포츠계에서 “나만 아니면 돼”라는 ‘침묵의 카르텔’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체육계 종사자는 “선배들이 협회 등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이들이 임원도 한다”며 “이러한 집단에서 소속 지도자나 선수 등의 비위를 알리기 쉽지 않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스포츠계를 떠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다음 장 계속

## 문체부 “예산 삭감 등 제재 수단 고민 중”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지만, 정부는 징계 권한을 스포츠계에 사실상 ‘일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 신고를 받거나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문체부에 징계를 요청한다. 문체부는 이를 대한체육회에 내려보낸다. 대한체육회는 산하 시·도체육회 등 징계 대상자의 소속팀으로 다시 사건을 넘긴다. 이후 대상자의 소속팀(1차 징계기관)이 징계를 결정한다. 대상자가 이에 불복하면 소속팀의 상급기관인 시·도체육회(2차 징계기관)가 사건을 다시 살펴본다. 1, 2차 징계기관을 뒤 합리적인 형식을 갖춘 듯하지만, 징계기관의 ‘인적 구성’상 제 식구 감싸기 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9월2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249건의 징계안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99건(약 39%)만 징계가 결정됐다. 10명 중 6명은 진상 규명이 이뤄졌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셈이다. 징계 요청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은 건수도 120건이나 됐다. 이는 징계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다는 의미다. 심지어, 1년 동안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도 15건에 이르렀다(〈표-유형별 신고·상담 접수 현황〉 〈표-유형별 사건 처리 현황〉 참조).

더 큰 문제는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가 이를 제재할 수단조차 없다는 것이다. 문체부 체육인재양성과 관계자는 “자율적 집단에서 ‘인사권’이 있는 자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구조다. 문체부가 직접 징계를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징계 요청에 대한 답변 시한이 없다”면서 “답변 시한을 명문화하거나 징계 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는 기관에 대해선 예산 삭감과 같은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방침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 선수는 감독과 운동처방사, 선배 선수들의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2020년 6월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감독과 운동처방사, 선배 선수는 각각 징역 7년-8년-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 인권 개선을 위한 이른바 ‘최숙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이 사건에서마저도 사건을 덮는 데 급급했다. 문체부는 2020년 8월 대한체육회에 당시 김승호 사무총장을 ‘해임’하고, 사건 관계자인 센터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김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을, 센터장에겐 ‘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스포츠계 관계자는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해 오히려 ‘지역 체육계를 걱정’하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이 보도되지 않았나”라면서 “임 의원은 이에 대해 해명했지만, 이는 스포츠계의 뿌리 깊은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 스포츠윤리센터, 수사권 등 권한 확대돼야

스포츠윤리센터는 최숙현 선수 사건과 2019년 스포츠계 ‘미투(Me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문체부 산하 독립기구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수사 권한이 없다. 설립 당시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3년이 넘도록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징계권도 대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것이다.

스포츠윤리센터와 관련한 여러 규정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우영 감독의 성폭행-돈 상납 의혹과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성폭력 건이 취하된 상태다. 대한체육회 규정상 성폭력 의혹을 신고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제25조의2(징계시효)를 보면, 성폭력 등의 징계 시효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다. 이를 넘긴 안건은 심의·의결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선수들이 체육계 카르텔 문화 때문에 비위 건을 곧바로 문제 삼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접을 각오가 서야만 폭로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의 활성화가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각 체육회 내에 스포츠공정위가 설립된 지 오래됐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역수영연맹 관계자의 설명이다. 야구 관계자는 “협회 임원이 중징계를 받는 등 야구협회에선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이 수용되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체육시민연대 대표인 허정훈 중앙대학교 스포츠정보테크놀로지연구소장은 “현재의 징계 결정 시스템상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지거나 보여주기식 징계가 나올 우려가 크다”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전문성 보완, 기능 확대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음성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다음 달 개장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38575&ref=A>

임오경 "체육 수업 2시간 연속 하고 학교에 샤워시설 갖춰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0812250001097?did=NA>

밀양시체육회, 스포츠 인재 꿈나무 육성지원 장학금 전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0\\_0002552426&cID=10812&pID=108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0_0002552426&cID=10812&pID=10800)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기 두고 혼선...학교체육 현장은 '당혹'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140300007?input=1195m>

[특별기획] "학교 운동부 부조리 100% 근절"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086>

경기도, 11~12일 '스포츠인권포럼' 개최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0\\_0002552479&cID=14001&pID=140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0_0002552479&cID=14001&pID=14000)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스포츠 인권교육 개최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228#google\\_vignette](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228#google_vignette)

전쟁 중에도 글로벌 스포츠 시장 접수한 '오일 머니'

[http://www.yonhapmidas.com/article/231207113751\\_913975](http://www.yonhapmidas.com/article/231207113751_913975)

2027 여자 월드컵 유치 경쟁은 3파전...유럽 vs 남미 vs 북중미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9041400007?input=1195m>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